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을 중심으로 본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고찰

오주희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

목 차

- I. 서론
- II.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문화예술예산
 - 1) 광역자치단체 1인당 지역내총생산
 - 2) 광역자치단체 1인당 문화예술예산
 - 3)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
- III. 광역자치단체의 경제력과 문화예술예산의 비교분석
 - 1) 인구와 문화예술예산
 - 2) 지역내총생산과 문화예술예산
 - 3)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의 비율
- IV. 문화예술예산 투입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 1) 문화예술예산과 지역 문화예술 기반 조성
 - 2) 문화예술예산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 3)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국문초록

본고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 특성을 고찰하고, 경제력 이외의 문화예술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와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예산은 인구 규모나 지역내총생산과 뚜렷한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경제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문화예술예산이 높은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0.640%를 기록하여, 경제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예술재정이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발전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재정을 연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기존의 예산 규모 중심 논의를 넘어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이라는 상대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투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는 전통문화와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을 지역 정체성 강화와 문화관광 활성화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이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유효한 분석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예산, 지역내총생산(GRDP), 문화예술정책, 문화재정

1. 서론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와 문화향유의 영역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권도운 2023, 1).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성장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지역발전의 중심 과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가치의 실현이 지역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5』 2025, 3-14).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축제, 공연, 전시, 문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예술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도시브랜드 형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예산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나라살림연구소 2026, 3).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핵심 정책 분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문화행정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재정 규모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력, 산업구조, 문화자원의 특성, 행정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박윤희 2012, 201-226).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 자체보다 경제력 대비 문화예술 투자 수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재정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4, 8).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예산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박윤희(2012, 201-226)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을 재정자립도, 문화시설, 문화재, 인구구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정보람(2014, 5)은 문화예산 비율과 주민 1인당 문화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권재오(2020, 40-49)는 문화재정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문화재정의 정책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문화예산 규모나 결정요인, 정책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경제 수준과 문화예술재정을 연계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문화예술정책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박윤희 2012, 201-226; 정보람 2014, 5; 권재오 2020, 49-50). 본고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을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한 연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¹⁾

문화예술예산의 규모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문화예술예산 총액이 클 수 있으나, 경제력 대비 상대적 투자 수준은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이라도 문화예술을 지역발전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설정할 경우 높은 상대적 투자 수준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단순한 예산 규모보다 경제력과 연계한 상대적 투자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와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1) 본고에서 검토한 박윤희(2012), 정보람(2014), 권재오(2020)의 연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26, 3).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을 비교하고,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을 산출하여 경제력과 문화예술재정의 관계를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을 해석하고자 한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2026, 3).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경제력은 문화예술예산 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둘째, 경제력이 높은 지역이 반드시 높은 문화예술예산을 편성하는가. 셋째,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넷째,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의 상대적 투자 수준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가.

본고는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재정을 연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예산이 경제 규모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책 방향과 재정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이라는 상대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을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경제 규모와 문화예술 투자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문화예술을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문화예술예산

1. 광역자치단체 1인당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49,483천 원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의 경제력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정책 추진 기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예산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을 지역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기초지표로 활용하였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인구 규모보다 산업구조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자동차·조선·석유화학·반

도체·철강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집적되어 높은 지역내총생산을 기록하였으며, 서울 특별시는 금융·정보통신·전문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기업 본사 기능이 집중되어 높은 경제력을 나타냈다.

하위권 지역 중 일부는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 중인 경향을 보인다. 대구광역시도 섬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첨단산업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였으며, 부산광역시는 항만·물류 중심의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 규모가 울산 등 중화학공업 중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하위권에 위치하지만, 이후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예산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경제력과 문화예술 투자 수준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2026, 3).

이러한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제력이 단순한 인구 규모와 도시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조업 또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집중된 지역은 높은 지역내총생산을 기록한 반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산업구조 전환이 지연된 일부 지역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그러나 지역의 경제력이 높다고 해서 문화예술예산 역시 높은 수준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화예술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도 높은 문화예술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확인된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2026, 3).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을 분석하여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정책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표 1. 광역자치단체 1인당 지역내총생산

순위	지역명	1인당 지역내총생산(단위:천 원)	비고
	전국평균	49,483	
1	울산광역시	85,194	
2	충청남도	67,758	
3	서울특별시	61,215	
4	전라남도	59,177	

5	충청북도	56,328	
6	경상북도	52,298	
7	경기도	46,996	
8	경상남도	46,550	
9	세종특별자치시	44,610	
10	강원특별자치도	42,563	
11	인천광역시	41,187	
12	제주특별자치도	39,914	
13	대전광역시	38,220	
14	전북특별자치도	37,980	
15	광주광역시	37,675	
16	부산광역시	37,085	
17	대구광역시	31,37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이상의 결과는 광역자치단체 간 경제력의 차이가 산업구조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력의 격차가 문화예술예산의 차이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은 문화예술정책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며, 문화예술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지역발전 전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광역자치단체 1인당 문화예술예산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전국 평균 122,497원으로 나타났다(나라살림연구소 2026). 상위권은 충청남도(266,363원), 전북특별자치도(243,382원), 제주특별자치도(227,819원), 강원특별자치도(215,613원), 전라남도(192,496원) 순이었으며, 하위권은 인천광역시(72,851원), 경기도(87,153원), 서울특별시(89,732원), 대전광역시(91,222원), 대구광역시(105,937원) 순으로 나타났다(나라살림연구소 2026). 특히 최고 지역인 충청남도와 최저 지역인 인천광역시의 차이는 약 3.7배에 달해 광역자치단체 간 문화예술예산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²⁾

<표 2>는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을 제시한 것이다.

표 2.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1인당 예산

순위	지역명	1인당 문화예술예산(단위:원)	비고
	전국평균	122,497	
1	충청남도	266,363	
2	전북특별자치도	243,382	
3	제주특별자치도	227,819	
4	강원특별자치도	215,613	
5	전라남도	192,496	
6	경상북도	164,168	
7	부산광역시	144,393	
8	광주광역시	144,144	
9	충청북도	137,452	
10	세종특별자치시	118,888	
11	울산광역시	114,980	
12	경상남도	108,684	
13	대구광역시	105,937	
14	대전광역시	91,222	
15	서울특별시	89,732	
16	경기도	87,153	
17	인천광역시	72,851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2016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2>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문화예술예산이 지역의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상위권에는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비수도권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인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는 모두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이는 문화예술예산이 단순한 재정 규모의 산물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지역발전 전략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정보람 2014, 5).

상위권 지역들은 문화예술을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2) 나라살림연구소(2016, 3), 앞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계산.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충청남도과 전라남도는 백제문화권과 남도문화권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정책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 단위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 진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국제 규모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과 무형유산 보존·전승사업 등을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결합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예술을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보여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지역브랜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넓은 생활권과 분산된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생활문화센터 확충과 문화서비스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문화예술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하위권 지역은 수도권 대도시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절대적인 문화예술예산 규모는 크지만 인구 규모가 매우 커 주민 1인당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수도권은 국립 문화예술기관과 대규모 민간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문화서비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교통·복지·주택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재정운용 구조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문화예술예산이 지역의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문화정책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문화예술을 지역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는 반면, 수도권은 국가 문화예술 인프라의 집중과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해 지방정부 문화예술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예산은 단순한 재정 규모보다 지역의 경제력과 지역내총생산 대비 투자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예산이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을 반영하는 정책지표임을 보여주며, 다음 절에서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광역자치단체의 경제력과 문화예술예산의 비교분석

앞 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러나 개별 지표만으로는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구 규모,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지방정부 문화예술재정의 상대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광역자치단체별 인구수,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을 비교한 결과, 세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인구는 51,111,158명이며, 전국 평균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9,483,000원,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122,497원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나라살림연구소 2026).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별 순위를 비교하면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 반드시 높은 문화예술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내총생산이 높은 지역 역시 문화예술예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문화예술예산이 지역의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재정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문화예술예산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자원의 활용 방식, 문화서비스 공급 구조, 지역균형발전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윤환 2012, 215-216; 정보람 2014, 5, 18-20).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수,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을 함께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및 1인당 문화예술예산

지역명	1인당 지역내총생산 (단위:원)		인구수 (단위:명)		1인당 문화예술예산 (단위:원)	
		순위		순위		순위
전국평균	49,483,000		51,111,158		122,497	
서울특별시	61,215,000	3	9,299,701	2	89,732	15
부산광역시	37,085,000	16	3,239,711	3	144,393	7
대구광역시	31,374,000	17	2,352,249	7	105,937	13
인천광역시	41,187,000	11	3,053,308	5	72,851	17
광주광역시	37,675,000	15	1,390,658	14	144,144	8

대전광역시	38,220,000	13	1,440,550	13	91,222	14
울산광역시	85,194,000	1	1,091,281	15	114,980	11
세종특별자치시	44,610,000	9	391,477	17	118,888	10
경기도	46,996,000	7	13,736,642	1	87,153	16
강원특별자치도	42,563,000	10	1,507,634	12	215,613	4
충청북도	56,328,000	5	1,596,749	11	137,452	9
충청남도	67,758,000	2	2,136,204	8	266,363	1
전북특별자치도	37,980,000	14	1,723,497	10	243,382	2
전라남도	59,177,000	4	1,778,171	9	192,496	5
경상북도	52,298,000	6	2,503,544	6	164,168	6
경상남도	46,550,000	8	3,205,787	4	108,684	12
제주특별자치도	39,914,000	12	663,995	16	227,819	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민등록인구」 및 「지역내총생산(GRP)」,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4. 광역자치단체 인구 규모,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및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 순위 비교

순위	인구수 (단위:명)	1인당 지역내총생산 (단위:원)	1인당 문화예술예산 (단위:원)	비고
1	경기도(13,736,642)	울산광역시(85,194,000)	충청남도(266,363)	
2	서울특별시(9,299,701)	충청남도(67,758,000)	전북특별자치도(243,382)	
3	부산광역시(3,239,711)	서울특별시(61,215,000)	제주특별자치도(227,819)	
4	경상남도(3,205,787)	전라남도(59,177,000)	강원특별자치도(215,613)	
5	인천광역시(3,053,308)	충청북도(56,328,000)	전라남도(192,496)	
6	경상북도(2,503,544)	경상북도(52,298,000)	경상북도(164,168)	
7	대구광역시(2,352,249)	경기도(46,996,000)	부산광역시(144,393)	
8	충청남도(2,136,204)	경상남도(46,550,000)	광주광역시(144,144)	
9	전라남도(1,778,171)	세종특별자치시(44,610,000)	충청북도(137,452)	
10	전북특별자치도(1,723,497)	강원특별자치도(42,563,000)	세종특별자치시(118,888)	
11	충청북도(1,596,749)	인천광역시(41,187,000)	울산광역시(114,980)	
12	강원특별자치도(1,507,634)	제주특별자치도(39,914,000)	경상남도(108,684)	

13	대전광역시(1,440,550)	대전광역시(38,220,000)	대구광역시(105,937)	
14	광주광역시(1,390,658)	전북특별자치도(37,980,000)	대전광역시(91,222)	
15	울산광역시(1,091,281)	광주광역시(37,675,000)	서울특별시(89,732)	
16	제주특별자치도(663,995)	부산광역시(37,085,000)	경기도(87,153)	
17	세종특별자치도(391,477)	대구광역시(31,374,000)	인천광역시(72,85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민등록인구」 및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3>과 <표 4>를 종합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경제력, 문화예술예산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14위임에도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전국 2위를 기록하였으며, 울산광역시는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1위였지만 문화예술예산은 11위에 머물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2026, 3).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예산이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보다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재정운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운환 2012, 201, 218-223; 정보람 2014, 5, 18-20).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인구 규모, 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을 각각 비교하여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인구와 문화예술예산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와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두 지표 사이에는 뚜렷한 비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13,736,642명), 서울특별시(9,299,701명), 부산광역시(3,239,711명), 경상남도(3,205,787명), 인천광역시(3,053,30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1위임에도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87,153원으로 16위, 서울특별시는 89,732원으로 15위, 인천광역시는 72,851원으로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하였다(나라살림연구소 2026, 3).

반면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서는 높은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이 확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규모가 16위임에도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227,819원으로 3위를 기록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인구 규

모에 비해 높은 문화예술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 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2026, 3).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이 전국 2위를 기록하여, 인구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예술 투자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이 인구 규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지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문화예술예산 총액이 크더라도 이를 주민 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1인당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인구가 적거나 생활권이 넓게 분산된 지역에서는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이 주민 1인당 예산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인구 규모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비수도권 지역은 생활문화 기반 확충, 지역축제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문화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문화예술재정의 특성을 해석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4, 8). 수도권에는 국립 문화예술기관과 대규모 민간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서비스 공급 구조가 지방정부 문화예술예산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5, 19-20).

따라서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인구 규모 자체보다 지방정부의 문화서비스 공급 방식과 재정운용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문화예술에 높은 재정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지역내총생산과 문화예술예산

광역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을 비교한 결과, 두 지표 사이에서도 뚜렷한 비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2026, 3). 지역의 경제적 여건은 문화예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주요 경제적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박윤환 2012, 215). 그러나 본고의 광역자치단체 비교에서는 지역 경제 수준과 문화예술예산 사이에 일관된 비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상위 지역인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는 문화예술예산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충청남도는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 2위와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 1위를 동시에 기록하여 경제력과 문화예술 투자가 함께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광역시도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1위임에도 문화예술예산은 11위에 머물렀으며, 서울특별시 역시 지역내총생산은 3위였지만 문화예술예산은 15위에 그쳤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2026, 3). 이는 높은 경제력이 곧바로 높은 문화예술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도 높은 문화예술예산이 확인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14위에 머물렀으나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전국 2위를 기록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역내총생산 순위에 비해 높은 문화예술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2026, 3).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세계서예비엔날레 등 국제 규모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형유산 보존·전승사업과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공연예술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을 지역발전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지역내총생산과 문화예술예산의 관계를 종합하면, 경제력은 문화예술예산 편성의 재정적 기반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예산은 재정 여건뿐 아니라 인구·지역 특성, 문화 인프라, 정치·행정적 요인 등 다양한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박윤환 2012, 215-216; 정보람 2014, 5, 18-20).

특히 수도권 지역은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수도권에는 국립 문화예술기관과 대규모 민간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서비스 공급 구조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한 재정 운용이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생활문화 기반 확충, 지역축제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전통문화 및 무형유산 보존 등 문화예술정책을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과 문화예술예산 사이에는 일관된 비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화예술예산은 경제 규모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는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전략적 투자 역시 문화예술재정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지방정부가 보유한 경제력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에 어느 정도의 재정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투자지표이다.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지역 간 투자 수준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지만 경제 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경제 규모를 고려한 문화예술 투자 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방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내총생산 자료와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0.24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0.640%), 제주특별자치도(0.570%), 강원특별자치도(0.506%), 충청남도(0.393%), 부산광역시(0.38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울산광역시(0.134%), 서울특별시(0.146%), 인천광역시(0.176%), 경기도(0.185%)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2026, 3).

표 5. 광역자치단체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 (단위:원)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 (단위:원)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	순위
전국	49,483,000	122,497	0.247%	-
서울특별시	61,215,000	89,732	0.146%	16
부산광역시	37,085,000	144,393	0.389%	5
대구광역시	31,374,000	105,937	0.337%	7
인천광역시	41,187,000	72,851	0.176%	15
광주광역시	37,675,000	144,144	0.381%	6
대전광역시	38,220,000	91,222	0.238%	12
울산광역시	85,194,000	114,980	0.134%	17
세종특별자치시	44,610,000	118,888	0.266%	10

경기도	46,996,000	87,153	0.185%	14
강원특별자치도	42,563,000	215,613	0.506%	3
충청북도	56,328,000	137,452	0.244%	11
충청남도	67,758,000	266,363	0.393%	4
전북특별자치도	37,980,000	243,382	0.640%	1
전라남도	59,177,000	192,496	0.325%	8
경상북도	52,298,000	164,168	0.313%	9
경상남도	46,550,000	108,684	0.233%	13
제주특별자치도	39,914,000	227,819	0.570%	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내총생산 순위와 문화예술예산 투자 비율 순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였다. 반면 울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화예술 투자 비율은 하위권에 머물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지역내총생산(GRDP); 나라살림연구소 2026, 3). 이는 문화예술예산이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행정적 특성 및 지역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박윤환 2012, 215-216; 정보람 2014, 5, 18-20).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14위에 머물렀지만,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전국 2위,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하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나라살림연구소 2026).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세계서예비엔날레 등 국제적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판소리와 농악 등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사업,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지역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경제 규모가 반드시 문화예술 투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전략적 투자 역시 문화예술재정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비수도권 지역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연예술 지원, 지역축제 육성, 문화관

광 콘텐츠 개발, 무형유산 보존 등 문화예술정책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문화예술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방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상대적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문화예술을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할 경우 적극적인 문화예술 투자가 가능하며, 이러한 투자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관광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을 평가할 때에는 예산 총액뿐 아니라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문화예술예산 투입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1. 문화예술예산과 지역 문화예술 기반 조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예산은 지역의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방향과 재정운용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문화프로그램 지원,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등 지역 문화예술 기판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8-9). 따라서 문화예술예산은 지역은 문화예술 기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은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을 신장하는 중요한 지역 문화 인프라로 기능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5, 3). 공연장·문예회관·생활문화센터·전시공간 등의 지속적인 조성과 운영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된다.

2. 문화예술예산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문화예술예산은 공연·축제·전시·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은 주민의 문화향유와 일정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재오의 분석에서는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

산액이 증가할수록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재오 2020, 49-50).

이는 문화예술이 단순한 소비 영역을 넘어 지역 정체성 형성, 관광 활성화, 생활문화 확산,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정책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전문예술단체 육성,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예술인의 창작환경이 개선되고, 문화예술 인력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공연·축제·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예산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생태계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측면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재정을 편성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순위는 14위에 머물렀지만,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전국 2위,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0.64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경제 규모와 문화예술 투자 수준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이 문화예술재정의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판소리와 농악 등 전통문화와 무형유산을 비롯하여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세계서예비엔날레 등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지역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예술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 확립,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문화예술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문화예술은 지역 정체성 강화와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지속적인 재정투자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

하는 유효한 분석지표일 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와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제력과 문화예술예산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나라살림연구소 2026). 이를 위해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지방정부 문화예술재정의 특성과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은 인구 규모와 일관된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인구 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은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문화예술재정이 단순한 인구 규모보다 지방정부의 문화서비스 공급 방식과 재정운용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보여준다.

둘째, 지역내총생산과 문화예술예산 사이에서도 뚜렷한 비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력이 높은 일부 지역은 문화예술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도 높은 문화예술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문화예술재정이 경제력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문화예술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0.64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대적 투자 수준을 기록하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6; 나라살림연구소 2026).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과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에선 전국 최상위권을 나타냈다. 이는 경제 규모와 문화예술 투자 수준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정부의 정책적 우선 순위가 문화예술재정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통문화와 무형유산 보존, 지역예술인 지원, 공연·축제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등 문화예술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예산과 문화예술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높은 문화예술예산이 곧바로 정책성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고는 지방정부 문화예술예산을 단순한 예산 규모가 아니라 지역내총생산 대비 상대적 투자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문화예술재정을 경제 규모의 결과가 아닌 정책적 선택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낮은 주민 1인당 문화예술예산을 문화예술 투자 부족으로 단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에는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상당한 비중이 분포하고 있으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 수는 지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25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5, 19-20). 따라서 수도권의 문화예술재정 수준은 시설 분포뿐 아니라 인구 규모와 문화서비스 공급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분포와 문화향유 수준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문화예술재정의 정책효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권재오 2020, 54-55). 또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등 통계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문화예술 투자와 정책성과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한다면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 연구의 설명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역내총생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지표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재정을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지방정부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재정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25]. 『문화한국 2035』 .
- 문화체육관광부. [2023].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 권도윤. 2023.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과 제도 변화.” 미간행,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재오. 2020. “문화재정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 이용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환. 2012.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50(2): [201-226].
- 정보람. 2014.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문화정책논총』 28(2): [4-25].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내총생산(GRDP).” 검색일: 2026. 5. 28.
- 나라살림연구소. “2026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부문 주민 1인당 예산 분석.” 검색일: 2026. 5. 28.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and Arts Polici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Ratio of Cultural and Arts Budget to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OH, JU-HEE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Music,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nd arts polici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Korea by focusing on the ratio of cultural and arts budgets to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an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and arts finance beyond regional economic capacit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utilized GRDP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the 2026 Analysis of Per Capita Local Government Budgets for Culture and Arts published by the Narasalim Institute. Based on these data,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per capita GRDP, per capita cultural and arts budgets, and the ratio of cultural and arts budgets to GRDP across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ultural and arts budgets do not exhibit a clear proportional relationship with either population size or regional economic capacity. In addition, regions with higher economic capacity do not necessarily allocate larger cultural and arts budgets. In particular, Jeonbuk State recorded the highest ratio of cultural and arts budgets to GRDP (0.640%) among all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demonstrating the most active investment in culture and the arts relative to its economic scale. This finding suggests that cultural and arts finance is determined not solely by economic capacity but also by the policy ori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comparing cultural and arts policies across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integration of

regional economic indicators and cultural finance. Moving beyond conventional analyses based on budget size, it employs the ratio of cultural and arts budgets to GRDP as a relative indicator to evaluate local governments' investment priorities in culture and the arts. The case of Jeonbuk State illustrates how cultural and arts policies rooted in traditional culture and intangible heritage can strengthen regional identity and promote cultural tourism. Furthermor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ratio of cultural and arts budgets to GRDP serves as a useful indicator for explaining the policy direction and prior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the arts.

■ Key words :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Cultural and Arts Budget;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Cultural and Arts Policy; Cultural Finance